

강화된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제도로 소비자 알 권리 총족시켜야

닭고기는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대표적인 먹거리이다.

웰빙 열풍이 불면서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인 닭고기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야심한 밤 맥주와 결들여 먹기에도 좋고 아이들의 간식으로도 좋아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닭고기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값싼 수입육의 시장 잠식도 가속화되고 국내산과 수입육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뜻이 되었다.

소비자들의 판단을 돋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판매업자의 의무가 되었고 정부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법제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기고문을 통해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가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아쉬운 점과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찾아보았다.

원산지 표시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률’



김 수 형 기자
축산신문

을 살펴보면 식품점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대형마트나 치킨 전문점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판매를 하는 모든 업소에서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한 채 판매해야 하는 것이다.

금지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률 제6조를 보면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 혹은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산지 표시 잘 이뤄지고 있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곳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대체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닭강정도 소비자들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보는 잘 제공하고

있었고 배달용 치킨에서도 원산지 표시는 찾아볼 수 있었으며 심지어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치킨도 원산지 표시를 잘 지켜나가고 있었다.

적어도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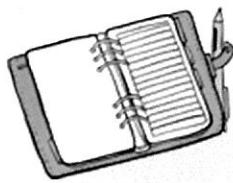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단속 결과 적발 사례가 4천642개소라고 발표했다.

위반 유형별로 봤을 때 거짓표기가 2천731개소로 58.8%를 기록했으며 미표시는 1천911개소로 41.2%로 나타났다.

물론 이 중에 닭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원산지 표기 위반이 주로 휴가철에 많이 이뤄지는데다 수입육과의 가격 차이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매년 소비량이 늘고 있는 닭고기도 안심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잘 지켜지고 있는 원산지 표시… 문제는 없나?

몇몇 배달용 치킨에서 확인해 본 결과 원산지 표기가 잘 보이는 곳에 커다랗게 되어있는 제품도 있었고 반대로 일부러 찾아야 확인할 수 있는 제품도 있었다.



배달용 치킨의 경우 포장 박스에 원산지 표시가 제각각 되어 있어 규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들은 박스 구석구석을 찾아가며 원산지 확인을 하지 않아 무의식 중에 수입육을 소비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와 관련해 일부 육계 농가들은 닭고기 원산지 표기에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 특히 배달용 치킨의 경우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는 위치가 제각각이어서 찾기가 어려울뿐더러 수입육을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를 숨겨놓듯 표기해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충남의 한 육계농가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추가로 원산지 표기 위치와 글자크기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져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 표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농가들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에서도 제기하고 있다.

올해부터 음식점에서는 음식점 외부 입구에 메뉴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듯이 축산물 원산지 표시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단체에서는 FTA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수입 육류들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원산지 표시를 현재와 같이 메뉴판에만 기재할 수 있

도록 할 것이 아니라 옥외에 메뉴 가격 표시를 하는 것과 함께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소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움직임 확대돼야

이와 같은 움직임이 계속 이어진다면 음식점 외에도 마트에서의 판매되는 치킨과 배달용 치킨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양계 관련 단체에서 국내산 닭고기 소비 촉진을 홍보하고 있지만 닭고기 수입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닭고기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부각시킨다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격과 함께 좋은 선택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인 치킨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총족시킴과 동시에 소비가 늘어나고 나아가 국내산 닭고기의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